

# 野 '이상민 해임안' 단독처리...정국 급랭

### 예산안 협상 빨간불...국조도 불투명

### 野 "책임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 압도적"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 이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과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찬성에서 투표가 치러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발의부터 처리까지 단

독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투표 결과도 총 투표수 183표, 찬성 182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은 앞선 예산안 협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결부해왔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에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이재명 체포와 사법처리를 저지하려는 알파한 속입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 로텐더홀 앞에

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가 언제 사법처리 받을까 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것"이라며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도 "장점을 좁히는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어제부터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법인세 최고구간(인하)이 어떻게 조부자 감세나,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는 거고 종업원들에게 돌아 가는 것인데 교조적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선언한 점, 당내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 등도 향후 정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을 상기하며 "누구도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는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안 처리는 민주당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文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대통령기록관 사육 맡아달라는 공문 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오게 됐다.

지난 10일 광주시 산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맡아 달라'는 공문을 공식 통보받았다. 지난날 초 구두 문의가 이어진 지 한 달 만이다.

곰이는 2018년 9월 남부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 온 풍산개로, 같은 해 11월 송강과의 사이에서 자견 '별' 6마리를 출산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듬해 광주, 서울, 인천, 대전 등지의 동물원으로 자견들을 분양했고, 광주 우치동물원에는 '별'이의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곰이와 송강은 현재 경북대수의과대학에서 사육중이다. 3년

만에 부모견과 자식견의 상봉이 이뤄지는 셈이다.

우치동물원 측은 기록관과 경북대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직원들을 보내 번 형식의 차량을 이용해 곰이와 송강을 광주로 이송할 예정이다.

또 곰이와 송강을 사육할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사육사도 선정할 계획이다.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받게 된다. 국가기록물인 만큼 관리책임이 뒤따르고, 사육비용 등 모든 적정관리 책임도 지자체가 떠안도록 돼 있다.

우치공원 측은 "새로운 환경인 만큼 부적응 등에 대비해 특별관리하고 일반인 관람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광산구의회 결과보고서 채택 총 154건 시정·처리 요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7일 제 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첫 감사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실태를 파악했으며 총 154건의 안건에 대한 시정·처리 등을 요구하며 구정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별 지적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재봉)는 시정 4건, 처리 22건, 건의 19건 총 45건을 채택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공병철)는 시정 1건, 처리 6건, 건의 52건 등 총 59건을 채택했으며, ▲'빛으로 채우는 일상' 행사 정산 등 재검토 ▲5일 시장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장육 단속 등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는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42건 총 44건을 채택했으며, ▲월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개선 ▲물부족 재난 대비 시설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임)는 처리 1건, 건의 5건 총 6건을 채택했다.

김태완 의장은 "올해 감사로 발견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구정 사업들이 더욱 완성도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상생의 협치모델 촉진법' 통과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업 소독중대, 농산 어촌 경제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 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민주 광주시당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굴욕 외교"

### 강기정 시장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서훈, 시민 염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 수여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또 다른 굴욕외교"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당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실무 주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면밀히 심사·추천한 훈장 서훈대상자에 대해 다른 기관이 끼여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나"고 반문했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후 30년 간 일제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에 해당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보류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만일 외교부가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본 눈치를 봐서 우리 국민의 훈장 수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그야말로 굴욕외교 시즌2"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를 향해 "평생을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롭고 처절하게 일본과 싸워온 양 할머니의 아픔을 살피기 바라고, 일본 눈치는 그만 보고 국민의 눈치를 좀 봐달라"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한편 강기정 시장도 지난 9일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서훈 수여는 광주시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 30년 동안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상은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인 양금덕 할머니와 5월 정전에 딱 맞는 의미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 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서훈 보류는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자로부터 명예회복을 위해 긴 세월 싸워왔던 할머니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 기부금 개인 보험료로 사용 민간위탁기관 적발

### 광주시 감사위 "적정 조치 취하라" 시에 통보

기부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보험료로 사용한 광주시 한 민간위탁 기관 관계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기관 일부 관계자들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월 110만 원 씩 총 121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들은 이 금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차야보험 또는 건강보험 보험료로 사용했다. 직원 6명의 개인보험료 납입에 사용한 것이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광주시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계좌자료 제출 요청 등의 방식으로 감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시했다.

감사위는 기부금을 부당하게 모집·사용한 해당 기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원자들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한 금액이다. 처우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로 사용하라는 취지와 함께 기부한 것"이라며 "지정 기부된 금액이라도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전남관광 매력' 카타르 월드컵서 알린다

### 전남도, 18일까지 10일간 도하 코니시하면서

전남의 청정·힐링 관광지가 월드컵을 타고 전세계인에게 알려진다.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도하 중심부코니시(Ai Comiche) 해변에서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전남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벤트는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카타르한국대사관 협업으로 이뤄진다.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만명의 관광객과 중동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관에서 전남관광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종배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날' 제정한다...전남, DJ정신 계승 조례 발의

### 박문옥 도의원, DJ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 맞아 기념일 추진

'12월 1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을 맞아 전남도의회 차원의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발의가 추진된다.

전남도의회는 박문옥 도의원(목포 3)이 9일 평화·인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문옥 의원은 "22년 전 12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헌신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용기를

세계가 평가한 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기존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12월 10일을 잠정적으로 전라남도가 지정한 '김대중 대통령의 날'로 제정하도록 조례안 개정 추진에 나섰다.

기념일 일자 잠정적으로 12월 10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2024년 1월 6

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지정 일자 는 유족이 속한 재단 측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해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사업과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민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이나 개인, 단체 등에는 포상도 주어진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달 후인 내년 2월 초 공표·시행될 전망이다. /박종배 기자

**호매민평**

이태원

**칼춤**

하늘 우러러한 점부끄러움 없기를  
앞세우는 바람에도..

태한

**최의**

바람? 희망사항

다다다다닥